

종합 KBS·MBC 총파업 ‘10일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MBC 총파업 지지

KBS 방송기술인 팀장 37명 보직 사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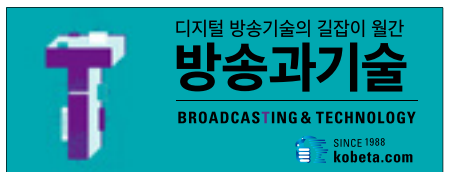
“방송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3면

종합 EBS 신사옥 송출 개시…‘일산시대’ 개막

EBS는 8월 14일 오전 4시 30분부터 일산 신사옥에서 방송 송출을 개시하고, 오전 10시 30분 TV주조정실에서 송출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5면

오피니언 [칼럼] 종이 기원

종이도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 ‘종의 기원’에 따르면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사라진다. 속성상 종이도 더 이상의 적응은 힘들 것 같다. 7면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256호
2017년 9월 13일(수)



KBS·MBC 총파업 돌입…돌아오라 고봉순·마봉춘!

MBC 노조 “필수 인력 남기지 않는 끝장 투쟁 이어갈 것”
KBS 새노조 “승리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KBS 노조 “방송법 개정 없이는 방송 독립 불가”

KBS와 MBC가 ‘고대영·김장겸 퇴진’을 외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10일째다. 공정 방송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열망은 보직자들의 잇따른 사퇴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경영진 퇴진이라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양측의 입장을 중재할 중재자가 나서지 않는 한 이번 총파업 역시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9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인 95.7%, 역대 최고 찬성률인 93.2%를 기록하며 시작된 이번 파업은 송출 등 방송 필수 인력을 남기지 않는 총력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찬반 투표의 결과는 93%에 달하는 절대다수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며 “경영진이 정말 회사를 위한다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직자 사퇴도 확대되고 있다. 김장겸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자리를 내건 보직자는 67명으로 전체 보직자 159명 중 42%에 해당한다. 총파업 찬반 투표 마감 이틀 전인 8월 27일 57명의 보직자들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사퇴해야 지금의 사태가 수습된다”며 자신들의 직책명과 이름을 내걸었다.

예견된 방송 파행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다. 총파업이 시작된 9월 4일 오후 4시 사측은 <생방송 오늘 저녁>이 끝난 뒤 광고 대신 화재 시 대피 요령, 산불 예방 방법 등이 담긴 영상물을 내보냈다. 일일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는 결방됐고, 그 시간에 <왕은 사랑한다>의 재방송이 편성됐다. 이후에도 광고는 송출되지 않았다. 다음날 광고 송출은 원상 복구됐으나 프로그램 결방은 주말을 기점으로 더 확대됐다. 라디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MBC 라디오는 FM4U와 표준FM 모두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라디오 음악 여행>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다.

뉴스 프로그램 외에 큰 차질을 빚지 않았던 KBS는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는 MBC와 마찬가지로 9월 4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기자, PD, 아나운서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으로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일부 축소 방송됐지만

MBC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KBS 새노조는 9월 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계단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번 총파업은 거짓과 가짜, 억압과 불통의 9년을 끌어버리는 최후의 결전”이라며 “승리하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9월 4일 0시부터 KBS와 MBC본부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이 싸움은 고대영 체제와 김장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궁극의 목표가 아닌 싸움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동 위원장 직무대행은 “언론을 장악했던 세력들은 이쯤되면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데 복귀하라 어쩌라 하고 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은 9월 7일 0시부터 파업에 동참했다. KBS 노조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KBS 노조는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에 항상 일관되게 공영방송 KBS의 정

치 독립을 위한 유일한 해답은 방송법 개정을 통한 특별다수제 도입이라고 외쳐왔다”며 “방송법 개정 없이는 진정한 방송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사측은 호소문 등을 통해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KBS의 경우 MBC와 달리 기존 활용분이 남아 있거나 부장급 PD들이 연출에 참여하고 있어 당장 방송 파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총파업이 길어질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해달라는 것이다. KBS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KBS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일단 직무에 복귀해 대화를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KBS 양대 노조와 MBC 노조는 경영진 사퇴 등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당분간은 방송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57호는 10월 18일(수)에 발행됩니다.

성명서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KBS와 MBC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5년 만이다. KBS와 MBC 구성원들이 또다시 험난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들의 힘찬 첫걸음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은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4대강 사업부터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 아니 오히려 정부의 앞잡이로 4대강 사업을 홍보하고, 세월호 참사를 놓고선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만약 공영방송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했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다.

“답변하지 마”라는 말로 더 잘 알려진 고대영 KBS 사장은 이제 답해야 한다. 탄핵 여론과 세월호 진상 보도, 사드 보도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일방적인 입장만 보도한 것이 과연 KBS가 말하는 ‘공정성’인지, 야당 후보 지지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논란, 사드 보도 지침, 삼성 보도 축소 등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보여 온 그동안의 행보가 ‘독립된 언론’의 모습인지 말이다. 고대영 사장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KBS에 남은 미래는 파국뿐이다.

보직자들마저 자리를 내놓는 MBC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미 8월 초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간 MBC는 이제 필수 인력도 남기지 않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버랑 끝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겸 MBC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스스로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편파·왜곡 보도는 기본이고 제작 자율성 침해에 걸릴까, 할 수 있는 모든 불공정 행위를 펼친 경영진은 구성원들의 마지막 발악을 ‘정치 파업’이라고 일축한다. 심지어 체포 영장 발부로 어찌까지 종적을 감췄던 김장겸 사장은 오늘 기습 출근한 뒤 “시청자와 MBC를 위한 길은 업무 복귀”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진짜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자본과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비판, 감시하라는 의미에서, 흔히 언론을 제4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특정 계층이나 세력을 옹호한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념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공영방송의 역할이 강조된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 있어야만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건

전한 사회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의 공영방송 KBS와 MBC는 권력에만 반응하는 동조자로 살아왔다. KBS와 MBC 구성원들은 말한다. 더 이상은 침묵하지 못하겠다고, 더 이상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싫다고.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는 그 날까지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와 함께할 것이다. 이들이 승리해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함께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2017년 9월 5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통위, KBS·MBC 총파업 해결에 나서나?

이효성 방통위원장 KBS와 MBC 파업에 개입 의지 밝혀



이효성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와 MBC 총파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9월 7일 오전 정부과천청

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와 MBC 노조의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밝혔다.

특히 MBC는 방송 필수 인력마저 총파업에 동참해 9월 4일에 방송 광고 송출이 중단됐고 이후에도 드라마 중간에 갑자기 공영 광고가 나가는 등 잇단 방송 사고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영 방송의 총파업을) 방송 장악으로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며 “방통위가 빨리 정상화를 안 시킨다는 청원서나 성명서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여야 상임위원들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부위원장,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상임위원,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야당 추천 위원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양쪽의 입장을 경청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위원장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반면 허욱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위원장과 뜻을 같이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관리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력이 아니라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전체의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정치권 일부와 언론에서 방송의 정상화 노력을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며 KBS와 MB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는 사회적 공감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설립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다. 표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고유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이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말한 뒤 “다만 김석진 상임위원의 말대로 위원 개개인의 입장이 아닌 방통위 전체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정치권 “늦었지만 다행”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으로 존재감 보여 달라”

정의당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국회 참여해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잘한 것 없지만 민주당 태도도 오만해”



9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철회하고 복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9월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 장악 음모가 문건 공개로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원내 복귀 명분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원내의 병행 투쟁을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한마음이 돼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9월 4일 “고용노동부를 행동대장 시키고 언론노조의 파업을 부추기며 방송사 내분을 일으켜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꼼수 시나리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김장겸 MBC 사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사장이 응하지 않자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법원에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9월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사장은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기념식 행사장으로 오기 전 자리를 피했고, 이후 9월 4일 아침까지 종적을 감췄다. 김 사장은 9월 4일 오전 기습 출근해 9월 5일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이 자진 출두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명분이 사라졌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술어진 언론 보도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뻔뻔한 방송 장악 음모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라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안보를 가장 중시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왔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여야 4당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긴급 처리 입장을 밝히자 어쩔 수 없이 ‘국회 복귀’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돌아오면서 국회가 1주일 만에 정상화됐다”며 “이제라도 107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는 다행스런 일”이라며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자성과 자숙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럽다”며 “자유한국당도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여당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SBS, 공정 방송 향한 도약의 움직임

SBS 노조 “‘박근혜 정권 도우라’는 보도 지침 있었다”

윤세영 SBS 회장,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보도 지침 전달
직능단체 공동 성명 “SBS 바로잡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SBS에서도 보도 지침이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9월 5일 발행된 노보 252호에서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간 박근혜 집권 기간 동안 윤세영 SBS 회장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하는 지침을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SBS 노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보도본부 부장단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같은 해 9월에도 보도본부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SBS 노조는 “지난해 10월 10일 보도본부 부장 이상 보직자 오찬 때 윤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며 지시한 사실상의 보도 지침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며 “이미 최순실 게이트가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되면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섰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SBS 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뉴스의 가치와 행동 규칙이 적혀 있다. SBS 노조는 “공유 가치라고 지시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심각한 안보 환경을 직시하고 여론을 선도한다’는 대목은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반대 세력

이나 비판적 시민사회, 노동운동 진영을 ‘종북 좌파’로 여론몰이하는 과정에서 단골로 동원했던 개념들과 일맥상통한다”며 “윤 회장의 보도 지침은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도 실무자들의 자율성을 철저히 훼손한 방송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SBS 노조는 윤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2016년 10월 24일까지 8시 뉴스 보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662일 동안 총 532건의 박근혜-정와대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비판 없는 단순 동정 보도와 일방적인 박근혜 입장 전달로 점철됐다고 밝혔다.

SBS 노조는 “윤 회장의 지침에 의한 방송 통제와 사유화는 SBS의 위기를 초래한 핵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윤 회장과 윤석민 부회장 부자는 물론 당시 경영진 누구도 책임을 지거나 진술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PD협회 등으로 구성된 직능단체도 9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대주주의 전횡이 반복되는 상황을 계속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해사 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소유와 경영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분리, 대주주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 시청자 이익을 위한 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윤세영 SBS 회장 사임…“소유와 경영 완전 분리” 선언

SBS 노조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윤세영 SBS 회장이 사임했다. 윤 회장은 9월 11일 오후 SBS 사내 방송을 통해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윤석민 의장도 SBS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직, SBS 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 SBS 콘텐츠 허브와 SBS 플러스 이사회와 이사회 회장직 모두 사임하고, 대주주로서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무 이사 직위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노보를 통해 윤 회장이 4대강 비판 보도를 이어가던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에게 압력을 가해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힌 데 이어 박근혜 정권

을 도우라는 보도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지상파는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의 대열에서 점점 뒤쳐졌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절대 권한을 갖고 있던 당시 정권의 눈치를 일부 봤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언론사로서 SBS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적은 없다”면서 “하지만 과거 이런 저의 충정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공정 방송에 흠집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BS 노조는 “대주주 일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방송기술용어

ARCore

ARCore는 구글이 새롭게 공개한 증강현실(AR) 플랫폼으로, 3D 심도 센서와 같은 추가 센서 없이도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AR 실행이 가능하다. 구글은 지난 8월 30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AR 소프트웨어 개발 킷인 ARCore를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3년간 개발해 온 Tango 플랫폼 기술에 기반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초기 영향력은 동일한 AR 플랫폼인 애플의

ARKit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이 지난 6월 ARKit을 공개하며 포스트 스마트폰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것이 AR 단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AR 단말기 시대를 대비한 예코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서도 구글이 애플과 함께 듀오폴리를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희 sh45@kobeta.com

KBS·MBC 총파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BS·MBC 총파업 지지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

KBS와 MBC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9월 5일 “KBS와 MBC 구성원들이 또다시 험난한 투쟁 길에 나섰다”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들의 힘찬 첫걸음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는 9월 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MBC 노조는 “지난 5년 동안 길고 암울했던 MBC 상황에 대한 구성

원들의 분노가 이제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김장겸 사장 체제를 끝내고 바닥까지 추락한 MBC를 다시 일으키려며 방송을 멈춰 세우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조합원들의 공감대가 이번 파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 10년간 우리 공영방송 KBS와 MBC는 권력에만 반응하는 동조자로 살아왔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겠다고, 더 이상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싫다고 일어난 KBS와 MBC 구성원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고대영 사장

과 김장겸 사장이 물어서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 직능단체들의 총파업 지지 성명에 이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학자들의 지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에 소속된 학자 467명은 9월 5일 성명을 통해 “KBS·MBC 기자와 PD 등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기본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사유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자유를 훼손해온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 등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학자들은 지금 이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며 시민들께 사과했다. 언론학자 467명은 “우리는 강단에

서 공영방송의 원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했다”며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KBS와 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겨울 우리 국민은 광장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공영방송 KBS와 MBC에 진실은 없었다”며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KBS와 MBC 언론 노동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정당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KBS 방송기술인 팀장 37명 보직 사퇴 “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

KBS 방송기술인 팀장 보직자 37명이 고대영 사장 퇴진을 외치며 보직을 내려줬다.

KBS 방송기술인 팀장 보직자 37명은 9월 6일 성명을 통해 “PD·기자·아나운서들의 제작 거부와 양노조가 주축이 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한다”며 “보직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적폐세력을 몰아내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를 만들어 송출하고, 수신료의 근간이 되는 방송 전파를 송신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KBS 뉴스를 보지 않는다”며 “KBS를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리고,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한 공영방송의 적폐세력은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방송기술인 팀장은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플랫폼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적폐세력이 물러나야 한다”며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자진 퇴진을 주장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방통위는 ‘적폐 이사’ 파면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라”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9월 5일 오후 2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언론현업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폐 이사’ 파면을 촉구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9월 5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출발은 KBS 적폐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적폐 이사 퇴출”이라며 “방통위는 ‘공영방송 적폐 이사 파면 시민 청원’에 참여한 시민 10만 4천 명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한 달 전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시민 청원’을 제안했고, 한 달 만에 시민 10만 4천 명이 참여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시민들은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들로 고대영·김장겸 사장과 함께 이인호·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이사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며 “적폐 세력의 편에 설 것인지, 적폐 청산을 명령한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지난 정부 시절의 잘못을 씻고 언론 자유 수호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작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공영방송 정상화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MBC 출신 국회의원들,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KBS·MBC 경영진을 향해 “즉각 사퇴만이 마지막 예의를 지키는 길”



MBC 출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박영선·박광온·김성수·노웅래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최명길 의원은 9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은 공영방송의 암흑기였다”며 “청와대가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송법 개정까지 막아가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차례대로 사장에 앉힌 결과 언론 자유와 독립성은 훼손됐고, 공영방송은 ‘정권 비호 방송’이라는 오명을 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오직 권력의 의

중만 살핀 고대영 사장과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이들은 왜곡 보도에 반발하는 직원을 내쫓거나 징계하는 등 악덕 기업주도 하지 못할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꼬집었다. 의원들은 “언론 적폐를 양산한 KBS와 MBC 경영진이 공범자라면 주범은 지난 9년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라고 지적한 뒤 자유한국당의 정국회·보이콧 선언에 대해서는 “집권 시절 공영방송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이 과연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KBS와 MBC 경영진에 대해 “직원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경영진의 자리보전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며 “즉각 사퇴만이 수십 년 동안 몸담은 조직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이달의 말말말

“MBC 총파업에 책임 느껴”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총파업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9월 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 이사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의 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학교 선생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학생들과 학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진은 구 여권(자유한국당 등) 5명, 구 야권(더불어민주당 등) 4명의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은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유 이사는 구 여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유 이사의 후임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게 된다. 보궐 이사의 임기는 2018년 8월 12일까지다.

유 이사의 사퇴서를 접수한 방문진 사무처는 방통위에 보궐이사 선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유 이사의 자진 사퇴는 현재 방문진과 MBC 경영진이 더 이상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다는 신호탄”이라며 KBS와 MBC 적폐 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한 구 여권 이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 이사의 사퇴는) 명백한 외압이자 자유 언론에 대한 탄압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문진 이사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력은 언론 공정성을 말살하려는 부당한 행위이자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유린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임기와 책임을 결단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중간 광고 등 지상파 비대칭 규제 폐지해야”

“지상파 더 이상 독점적 위치 아니야”

“비대칭 규제로 인한 시장 왜곡? 자칫하면 ‘제2의 대만’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일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제기됐다.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새 정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송 재원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매체균형발전론을 기반으로 도입된 비대칭 규제의 주요 전제였던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적 지배는 다 사라졌고, 지상파 방송사가 시장의 수요-공급 체계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며 부당 행위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중간 광고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방송 광고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송 광고 매출은 3조2,20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511억 원 감소했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상파 광고 매출 비중은 2012년 60.9%에서 2016년 50.4%로 10.5%p 줄어들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 매출은 같은 기간 35.4%에서 41.9%로 6.5% 증가했다. 지상파와 종편을 비롯한 PP의 광고 매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홍 교수는 “이러한 매체별 매출액 격차의 급감은 매체균형발전론에 근거해 정책적으로 방송 광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비대칭 규제 방식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

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관계자도 홍 교수의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독과점으로 인한 왜곡된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식이 비대칭 규제인데 지상파는 이제 더 이상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요즘에는 광고주들이 지상파보다 종편이나 CJ 등 일부 케이블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중간 광고 없이 도입된 광고총량제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완화된 유료 방송 광고 제도로 오히려 비대칭 규제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최근 등장한 PCM이라는 유사 중간 광고도 언급했다. Premium Commercial Message(PCM)는 최근 지상파에서 선보인 CM 중 하나로 긴 프로그램을 두 토막으로 잘라 중간 광고 효과를 내고 있다. 홍 교수는 “광고총량제 실효성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중간 광고가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PCM이라는 유사 중간 광고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규제 완화된 가상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 심의 논란으로 인해 신유형 광고로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지난해 외주제작에게 부여된 간접 광고와 협찬은 지상파와의 갈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방송 광고 정책이 아직도 방송 규제를 통한 시청자 보호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광고 규제는 시장의 수요-공급 체계를 왜곡해 콘텐츠 환경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왔다. 홍 교수는 “광고와 관련된 모든 비대칭 규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대만처럼 자체 콘텐츠를 생산·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며 “최악에는 무수히 많은 채널을 해외에서 수입해 채워 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유승희 의원 “종편 협찬 매출 여전히 기형적”

“종편의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은 비정상 광고 영업의 결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대다수가 여전히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종편의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종편 4사의 협찬 매출 비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올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의 협찬 매출 비율은 지난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의 경우 협찬 광고 매출이 53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0.6%를 차지해 광고 매출을 앞질렀고, MBN(32.3% → 40.3%, 8%p 증가), 채널A(39.3% → 45.6%, 6.3%p 증가)도 협찬 광고의 비중이 40%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편의 협찬 광고 비율은 지상파와 비교했을 경우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 지상파방송 3사의 협찬 광고 매출 비율은 KBS가 21.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SBS(19.1%)와 MBC(14.5%)가 이었다. 수치로만 놓고 보면 종편의 절반 수준이다. 유 의원은 “종편의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은 비정상적인 광고 영업의 결과”라며 “종편이 신문과 방송 겸영 과정에서 신문 광고와 종편 광고를 패키지로 판매한다는 의혹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찬의 기본 원칙이나 필수적인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화 방안 마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위법한 협찬 광고에 대해서는 조사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OBS 경영진 사퇴 의사 밝혀

유진영 지부장 “백성학 회장이 직접 경영진 사임 언급”



윤세영 SBS 회장이 사임을 표한 데 이어 OBS 경영진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진영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장은 9월 12일 본지와와 전화통화에서 “OBS의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오늘 오전 국창회의에서 김성재 부회장과 최동호 대표가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추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김성재 부회장과 최동호 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OBS 노조는 김성재 부회장이 피고소인 조사차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시간에 맞춰 ‘노조 탄압, 방송 파탄 주범 김성재·최동호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OBS 노조는 송용차에서 내리는 김 부회장을 향해 ‘김성재·최동호 OUT’을 외치며 퇴진을 촉구했다.

앞서 OBS 노조는 지난 5월 16일 임금 체불과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노조 간부 징계, 조합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김 부회장과 최 대표를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고소 이후에도 탄압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OBS 노조에 따르면 최동호 대표는 9

월 6일 전 직원에게 ‘경영 위기 함께 헤쳐 나갑시다’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OBS 노조 관계자는 “구구절절 이번 해고는 정당했다고 항변한 뒤 대승적 차원에서 중노위 재임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최소한 대승을 말하려면 부당해고로 판정난 경영파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같은 책임지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BS 사측은 지난 4월 14일 13명의 언론 노동자를 해고했다.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지했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라며 해고 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어떤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던 사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열흘 뒤인 8월 1일 정리해고 철회를 발표했다.

OBS 노조는 9월 7일 성명을 통해 “회사는 대승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임금을 거론한다”며 “지난 입단협에서는 노골적으로 10% 임금 반납을 7월부터 소급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의 주장과 달리 현재 OBS는 별다른 사업 확장 없이 매년 이익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무제표에 따르면 OBS는 2012년 56억 원, 2013년 16억 원, 2014년 14억 원, 2015년 6억 원의 수익을 냈다.

OBS 노조는 “이미 여러 토론회에서 OBS의 경영 위기는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당면한 OBS의 위기는 재허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OBS 위기의 본질은 부당 정리해고로 만천하에 드러난 무능한 경영진이고 지역 방송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여 빚어진 시청자들의 신뢰 추락”이라며 “김성재 부회장과 최동호 대표의 사퇴만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FM라디오 들을 수 있다

2018년 출시되는 삼성·LG 스마트폰에 FM 라디오 수신 기능 탑재

내년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에서 FM 라디오방송을 들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서 FM 라디오방송 수신 기능이 가능해진다고 8월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미 지난해 출시한 ‘Q6’에 FM 라디오 직접 수신 기능을 탑재했으며,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S9’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판매된 스마트폰에서는 FM 라디오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라디오 직접 수신을 재난통신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주 지진 때 데이터망이 2시간여 다운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재난 경보 청취가 불가능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쓰나미 때 데이터망이 다운돼도 스마트폰 라디오 직접 수신으로 침착하게 정부 구호 활동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은 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했을 때 재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 라디오방송의 경우 고지대뿐 아니

라 지진, 해일 등의 재난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직접 수신할 경우 스트리밍 라디오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3~6배 정도 적기 때문에 재난 매체로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이동통신 3사, 단말 제조사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정은 입법화를 통한 강제화가 아닌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다”며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M 라디오방송의 직접 수신 기능이 가능해지면 통신비 절감 효과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라디오방송을 스트리밍으로 하루 1시간 청취할 경우 한 달간 1.3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쿠폰 비용으로 환산 시 약 1만 5천 원~2만 원에 해당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전과정책국장은 “이번 스마트폰 FM 라디오 기능 활성화로 국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라디오의 경쟁력 제고와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mjjang@kobeta.com

“문체부와 기재부는 아리랑국제방송 경영 위기 책임져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아리랑국제방송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성명서 발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연합회는 8월 29일 성명을 통해 “문체부는 경영 위기와 예산 부족이라는 조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아리랑국제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통보한 기재부는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당장 내년부터 90억 원의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작은 기재부의 예산 삭감이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매년 약 60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이중 약 60%에 해당하는 370억 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50억 원은 문체부가 마련한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보유 기금에서, 나머지 170억 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해왔다.

문제는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

방송교류재단의 보유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방송발전기금도 삭감했다는 점이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면서 아리랑국제방송에 편성되는 방송발전기금을 10% 삭감했다. 당장 내년부터 90억 원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매체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방송장비 정비 및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진행은커녕 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족한 방송 제작 인력을 인턴과 과점직, 비정규직 등으로 꾸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조차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올바른 이해 증진에 힘써온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연합회는 “문체부는 국제 방송에 대한 법률과 예산 확보 등 아리랑국제방송을 위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오직 권한만 행사해 왔다”며 “다시 한번 작금의 사태를 책임지고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2018년 방통위 예산안 전년대 비슷한 ‘2,320억 원’ 편성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에 중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일반회계 576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 원이며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 원에 비해 73억 원(3.1%)이 감액됐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 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 원(0.3%)이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성과지표 미흡 사업 등에 대한 자체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핵심국정과제에 집중 투자 하는 등 예산 편성·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방통위 예산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 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101억 원,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에 31억 원을 편성했으며, 스마트폰 앱 결재 피해 예방, 불법 위치정보 남용 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셋째,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 원, 위치정보 산업 활

성화 기반 구축에 13억 원, 방송통신 국제 협력 강화에 12억 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건전한 사이버 유통문화 조성에 46억 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 원, 몰가,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 원, EBS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 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 원, 지역·중소 방송의 우수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EBS 신사옥 송출 개시…‘일산 시대’ 개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로 혁신의 아이콘 될 것”

EBS가 본격적 일산 신사옥 시대를 시작했다. EBS는 8월 14일 오전 4시 30분부터 일산 신사옥에서 방송 송출을 개시하고, 오전 10시 30분 TV주조정실에서 송출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축 경과보고와 시설 소개를 맡은 홍성구 EBS 네트워크기술부 팀장은 “이번 시설 구축으로 EBS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IP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디지털화로 기술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발맞췄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조정실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에는 흔치 않은 2단 구성과 사라진 스위처다. 이전에는 타이밍을 맞춰 사람이 직접 스위처를 조작해야 했지만 디지털로 자동화하면서 스위처가 이전 시설에 비해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방송의 안정성 역시 향상됐다. 이전에는 주조정실과 비상 주조정실이 우면동과 도곡동에 위치해

공간적으로 많은 과리가 있었지만, 신사옥에는 8층과 지하 1층에 각각 주조정실과 비상 주조정실을 구축해 만일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도 방송 사고 없이 매끄러운 송출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다만, UHD 시설은 아직 완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홍성구 팀장은 “이른 시일 내에 UHD 시설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기념식에 자리한 조규조 EBS 부사장은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오늘 첫 송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더운 여름 쿨은 땀방울을 흘려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EBS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조 부사장은 “이번 일산 송출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 서비스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속희 sh45@kobeta.com**



KBS-MBC-SBS 재허가 깐깐해진다 방통위 “방송사 재허가 시 부당 해직·징계 부분 심사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8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등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해 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 관계법 및 해직 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

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MBC에서 ‘공정 방송’ 투쟁을 하다가 해직된 이용마 기자, 최승호 PD와의 만남을 선택한 것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번 업무보고 역시 방송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의 연장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에서 밝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부분은 당장 하반기에 시작되는 KBS·MBC·SBS 재허가, MBN 재승인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위원장이 최승호 전 MBC PD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시사화에 참석한 만큼 KBS와 MBC 재허가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범자들> 관람을 마친 이 위원장은 “우리 언론의 현실이

참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MBC에서 해직된) 이용마 기자가 빨리 복직이 돼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2016년 세계 70위까지 하락했다”며 “인터넷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보편·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속 등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 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속 및 차단을 강화하

고, 불법 스톱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독립 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거래, 흡소평사의 납품 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착화된 갑-을 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송 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통합방송법 재논의 필요해” 공감대 형성 “기존 논의는 방송법과 IPTV법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그쳐” “지난 9년 동안 무너진 공적 영역에 대한 회복 시급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기는커녕 방송법과 IPTV법을 기계적으로 통합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통합방송법’의 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열린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권과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통합방송법 제·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유료방송통합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 있는 칸막이식 규제를 단일 규제체계로 일원화한 것으로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가 아닌 진정한 통합방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통합방송법은 논의 단계부터 ‘밀실 논의’, ‘사업자 민원 장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표면적으로는 방송법과 IPTV법 규제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료방송 중심의 기계적 규제 완화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업계와 학계에서는 “유료 방송 중심의 과도한 규제 완화는 결국 돈을 낸 만큼 이용자

복지를 가져가라는 식으로 흐를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김환영 방지법 등 그동안 논의돼온 공적 서비스 조항 등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강행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방송법 관련 개정 논의는 밀실 연구로 진행되거나,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만 강조해 방송의 공공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변화된 시대상에 맞는 통합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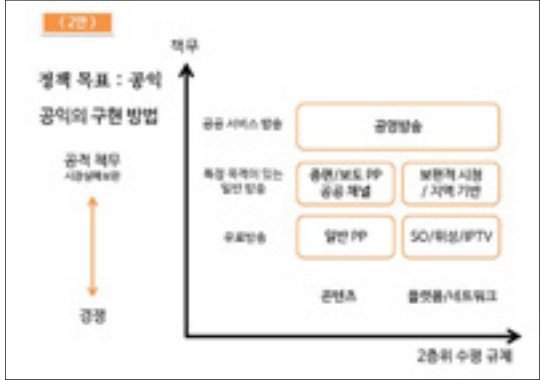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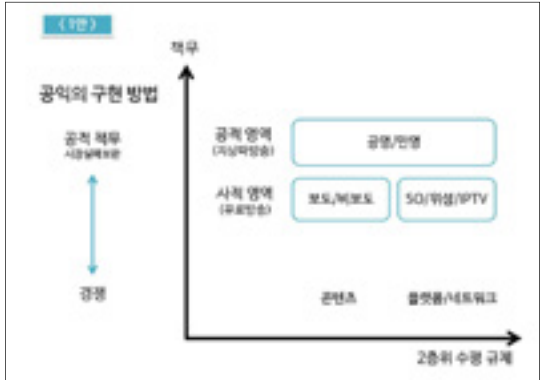
노화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전 정권 9년간 방송의 산업화,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 정책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이 붕괴하고 후퇴했다”며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경기 과기정통부 과장은 “지난해 마련된 통합방송법을 두고 단순한 기계적 결합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곽진희 방통위 과장은 “변화하는 방통 환경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적 형태의 제도 개선 작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개념 재정립’에는 모두 동의…사업자 의무 구분에는 업계별 의견 달라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이명박 정부에선 방송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정책 추진으로 방송의 공적 영역 퇴행을 유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선 방송의 공적 영역을 회복하고, 건강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한 뒤 위와 같은 사업자별 의무 구분을 통해 차등 규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사업자별 의무 구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방송의 산업화와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산업 재편으로 인해 불

괴된 방송 생태계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매체별 획정을 임의로 포괄하거나 분류하지 말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나 포털의 동영상 서비스, 향후 더 모호한 영상 서비스 등을 기존 미디어 관련법 기준에 따라 역지로 분류하고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적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며 “콘텐츠 특성별로 나눠 적용하는 것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위해 더 낫지 않느냐”고 덧 붙였다.

케이블 업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는 방송을 무료로 유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입률이 5% 내외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유·무료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며 “발제자가 제안한 1인과 2안을 혼용해 공적 영역과 특수 영역, 일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어떨까”고 제안했다.

	플랫폼/네트워크		콘텐츠
	공영	민영	
공적 영역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특수 영역	지역지상파, 지역채널 (지역성 구현)		보도PP
일반 영역	SO, 위성, IPTV		일반PP, 흡소평

김 박사는 특히 지역성 구현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방송의 경우 중앙보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 지역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방송 정책에서 비대칭 규제는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 방송의 비대칭 규제는 시장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 규제 정책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부장도 사업자별 분류 체계에 의문을 표했다. 고 부장은 “사실상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 차이가 없는데 2안을 보면 차등적인 의무로 분류했다”며 “또 소유 및 재원 구조 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KBS와 EBS를 제외한 MBC, SBS, 종편, 보도 채널을 어떻게 분류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아쉬운 지상파 UHD 방송, 그러나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다

양방향 서비스, 다채널 방송, 재난 방송 등 중요한 서비스 실현해 나가야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두 달을 조금 넘긴 시점에 산적해 있는 개선 사항과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지만, UHD 방송이 이끌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야3당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방송연구회가 주관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8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1일 시작한 지상파 UHD 본방송의 현재를 진단하고 더 많은 국민이 UHD 방송을 즐길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우선, 이형민 MBC UHD전환전략부장은 “UHD 방송 추진이 난관을 겪는 이유는 온 국민을 위한 서비스임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투자와 노력만으로 가능하리라는 편견 때문”이라며 UHD 본방송 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UHD 방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시청자가 적은 이유를 꼬집었다.

이 부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지속적 투자로 콘텐츠를 만들고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만큼 가전사도 시청자가 불편 없이 수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신 환경 개

선을 위해서는 가전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며, 지상파 경영 악화를 개선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진취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방송사의 주장에 시민사회에서는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HD도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방송을 준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UHD는 방송사가 시청권과 수신 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하겠다고 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노 사무국장은 “로드맵을 단축하지 않는 한 UHD로 가다가 또 다른 방송에 밀리고 말 것”이라며 현재의 UHD 전환 로드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UHD 전환 로드맵은 2025년에 HD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HD로 전환하고 UHD가 등장해 본방송을 개시하기까지 5년이 걸린 상황에서 UHD 이후의 차세대 방송의 등장 역시 2025년 전에 이뤄질 거라는 것이다. 노 사무국장은 “로드맵을 이렇게 길게 잡은 것은 방송사의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것뿐, 시청자를 위한다면 이런 식의 로드맵은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 역시 이러한 주장에 일부분 동의했다. 김 교수는 “진정한 Full HD를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UHD를 말하니 시청자가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다”며 “하이브리드차도 못 타는데 수소차·전기차를 말하는 격”이라며 UHD 전환에 있

어 시청자와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정서적 괴리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UHD 전환을 통한 방송 수신 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유료방송은 새로운 가입자 확대에, 지상파는 재전송료를 더 받아보려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결국 시청자를 뜯어낸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UHD 전환을 통해 진정으로 시청권 확보와 수신 환경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큰 꿈으로 그려졌던 UHD 방송이 본방송 개시에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다소 회의적 평가가 잇달았지만, 지상파 UHD 방송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는 여전히 기대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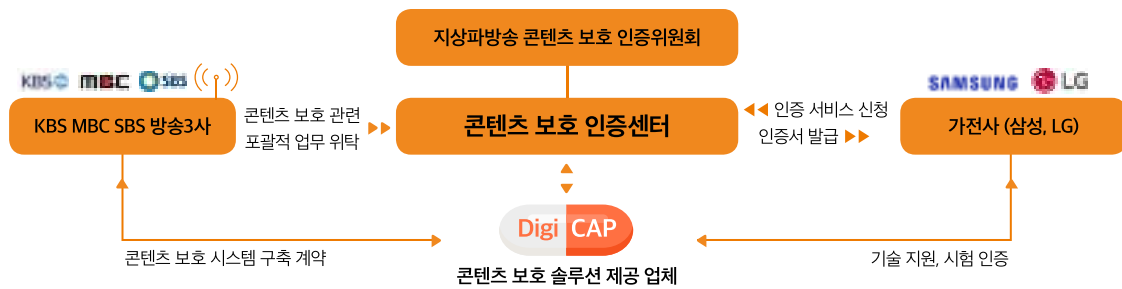
손지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은 “경영 악화 속에서도 여전히 강점을 가진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과 제작 역량은 유료방송 일변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 환경의 변화를 불러올 구심점”이라며 지상파 UHD 방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특히, “양방향 서비스, 다채널 방송, 재난 방송 등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술이 가능하다면 정책적 노력을 통해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을 통해 더 풍부한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 발족

“콘텐츠 유통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인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가 발족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8월 17일 스탠포드호텔서울을 스탠포드홀에서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제1회 인증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에 적용되는 콘텐츠 보호 기능의 확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모색을 비롯해 인증센터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불법 콘텐츠 유통

이 양질의 콘텐츠 재생산 구조를 파괴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한류 확산에도 장애가 돼 국가적 피해로 이어진다”며 “시청자의 불관리와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콘텐츠 보호 기술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해 6월 ‘지상파 UHD TV 방송 송수신 정합’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콘텐츠 보호 기술을 포함시켰다. UHD 콘텐츠 보호 기술은 ΔTV가 수신하는 방송 신호를 암호화하는 기술 Δ저장된 콘텐츠를 관리하는 디지털저작권보호(DRM) 기술 Δ저장된 콘텐츠 추적을 위한 워터마크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기술 도입이 확정되자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는 제3의 인증기관인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센터’를 설

립기로 했다. 인증센터는 콘텐츠 보호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인 디지털, 인증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인증센터는 위탁 계약을 맺은 디지털으로부터 콘텐츠 보호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시험 인증, 인증서 발급 등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인증위원회는 일종의 상위 기관으로 콘텐츠 보호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인증센터의 모든 운영을 총괄한다.

인증위원회는 정화섭 KBS UHD추진단장, 이성근 MBC 제작기술국장, 류기형 SBS 기술국장, 김영태 RAPA 인증센터장,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매비우스) 사무국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7인 위원 간 호선(互選)을 통해 정화섭 KBS UHD추진단장으로 결정됐다.

정 위원장은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기술이 도입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콘텐츠 보호 기술 도입 자체가 불법으로 열목져 있는 콘텐츠 유통 시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 선임 이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Δ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 운영 규정과 Δ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위기 대응 매뉴얼이 의결됐다.

이날 인증위원회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집중했다. 김영태 인증센터장은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와 관련해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문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조치 사항이 담긴 설명서를 보고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TV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① 가전사 AS센터를 통해 문제 상황을 접수한 뒤 ② 가전사와 인증센터에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③ CP 기능상 문제로 다수의 모델에서 발견된 경우 모든 방송사 스크램블 기능 해제(클리어 신호 송출) ④인증센터에서 대처 방안 협의 ⑤인증위원회 보고 ⑥CP 업데이트 실시 등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고민수 위원은 “매뉴얼을 보면 ‘클리어 신호 송출’이라고만 돼 있는데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와 있지 않고, 클리어 신호 송출 외의 다른 예비 방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석철 위원도 클리어 신호를 송출해서 보호 기술이 풀렸을 경우 콘텐츠 누출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한 프로세스가 없다”며 “유급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태 인증센터장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만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가 불법 저장된 건이 발생하지 않아 이 부분을 생각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추가 방안을 마련해 다음 인증위원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제25-2대 대의원대회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8월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제25-2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정수 77명 중 55명(위원 22명 포함)이 참석해 △제25-2대 감사 선임 건

△제25-1대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제25-2대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건 △제25-2대 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대의원대회는 김창근 연합회 교육실장의 성원 보고 뒤 박종석 연합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방송 미디어 시장의 경계 파괴, 플랫폼 업체들의 콘텐츠 시장 진출 등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연합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해 시대의 요구에 동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연합회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며 “지난 1년간 연합회 활동 사항과 예·결산 보고를 꼼꼼히 검

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영우 연합회 정책고문은 연합회 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를 진행했다. 서 정책고문은 특히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의 MOU를 통해 성사시킨 KOBATV를 강조했다. 그는 “KOBATV 전사회에 국산 UHD 방송 장비로 구성된 방송 제작 및 송출 스튜디오를 구성해 KOBATV 전사회 소식과 주요 방송 장비 업체의 전시 상황을 현장 라이브로 방송했다”며 “UHD TV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직접 수신을 시연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일 먼저 상정된 안건은 제25-2대 감사 선임 건이었다. 연합회는 “제25-1대 감사였던 장재훈 감사가 CBS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합회 감사를 유지할 수 없기에 장상원 감사보를 회칙 제12조 ‘나’항에 의거해

연합회 제25-2대 감사로 선임을 요청한다”고 의결을 주문했고,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회칙 제12조 ‘다’항에 의거해 연합회 회칙 개정안 승인 요청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박 회장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상임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 회칙을 현 상황에 맞게 정리하고, 사무처 규정에 포함돼 있던 해외 출장 및 연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옮겨와 신설했다”며 “회칙 개정 비교표를 검토하신 뒤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변경된 회칙을 상세히 설명했고, 회칙 개정안 역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강민정 mjikang@kobeta.com

단신

EBS 사장에 장해량 전 KBS PD 선임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8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장해량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EBS 사장직을 공모했으며, 총 2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시행해 신입 EBS 사장을 임명했다. 장해량 교수는 1982년 KBS에 입사해 다큐멘터리 PD로 30여 년간 활동하며 <추적60분>, <세계는 지금>, <KBS스페셜>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한국PD연합회장과 KBS 1TV 편성국장, KBS Japan 사장, (사)한국PD교육원장을 거쳤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면 EBS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신입 사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8일부터 전임자의 남은 기간인 2018년 11월 29일까지다.

전숙희 sh45@kobeta.com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직무대행에 김상훈 인하대학교 교수

김상훈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8월 25일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사장 직무대행은 아리랑국제방송의 정관에 따라 선임비상임 이사로서 차기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김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광고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위원회 위원직을 역임했다. 앞서 ‘초호화 출장’으로 물의를 빚고 사임한 방석호 아리랑국제방송 전 사장의 후임으로 선임된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8월 24일 사퇴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지난 7월부터 문 사장의 ‘사퇴설’이 언급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준희 YTN 사장과 우종범 EBS 사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UHD KOREA, ‘UHD 신호처리기 보급 협력사업’ 실시

UHD KOREA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UHD 신호처리기 보급 협력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HD KOREA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별도의 UHD 신호처리기 설치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기존 안테나 교체 등 주요 설비의 보수가 요구된다”며 사업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 요건 및 공사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지상파방송 콜센터(1644-1077) 또는 UHD KOREA 담당자(대외협력팀 신중섭, 02-3219-6356)에게 문의하면 된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이 기원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종이의 지위는 디지털 Paperless 환경이 도래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종이도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 ‘종의 기원’에 따르면 개체는 사라진다. 속성상 종이도 더 이상의 적응은 힘들 것 같다.

지난 4월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에 이어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는 은행답게 청년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단기간에 100만 계좌 개설을 넘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출이 간편해서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중은행은 1년에 많아야 신규 계좌 개설 수가 15만 정도라고 하니 그 기세가 놀랍다. 인터넷 은행은 기본적으로 종이 통장이 없다. 기존 시중은행도 9월 1일부터 ‘종이 통장 미발급’ 옵션을 선택하면 종이 통장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2020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종이 통장 미발급이 기본 옵션이 될 것 같다. 그러니 2020년 이후에 종이 통장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독서 - 통장 읽기’라는 우스갯소리도 바야흐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시의 척도로 여기는 ‘내가 통장이 몇 개...’란 표현도 미래에는 민속 박물관이나 가야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그래 그땐 그랬지”

과학기술정통부(줄여서 과기정통부라고 한다. 어쩐지 과기정통부 같은 필이든다)는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 정부지자체나 공공 기관의 각종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우선 금년 내에 자동차 정기 검사 사전 안내

문을 인터넷 메신저로 발송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연간 2천만 건에 달하는 정기 검사 사전 안내문만 메신저로 바뀌도 종이, 인쇄 및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45억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종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보편적 모바일 미디어(정확히는 미디어움)다. 종이(Paper)란 단어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줄기인 파피루스(Papyrus)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파피루스는 허접해서 쉽게 사용하기가 힘들었으며, 지금 보는 형태의 종이는 중국 후한 시대 서기 105년 환관인 채륜에 의해 발명됐다고 한다. 그보다 약 300년 전인 한 고조 유방 때가 종이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다. 그 후 인쇄술의 발달로 종이는 현재까지 수백 년 이상을 매체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이의 지위는 디지털 Paperless 환경이 도래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종이도 다윈의 ‘종의 기원’처럼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된다. ‘종의 기원’에 따르면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사

라진다. 속성상 종이도 더 이상의 적응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필자는 종이란 매체가 좀 더 버텨주길 원한다. 책에서 나는 특유의 종이 냄새를 전자책인 eBook에선 느낄 수 없다. 대학교 때 학과 사무실로 배달되던 모 여대의 학생(당연히 여학생)이 보내온 학보의 감동은 지금의 이메일 따위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 같은 과 학생들에게 빼기고자 일부러 며칠씩 과사무실 우편함에 묵혀두던 센스를 부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로부터 책 도둑은 일반 잡범과는 궤를 달리해서 취급해 줬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영화로 만든 ‘책도둑(2013)’과 소설 ‘책도둑(2005)’은 감동의 무게가 다르다. 기타 수만 가지의 이유로 종이도 지속되기를 기원(祈願)한다. ‘종이 기원’이란 단어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패러디 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언제부터인가 말장난을 잘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말(馬)장난 치다가 빵에 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나서부터는.

공영 방송사 2곳이 파업 중이다. 해당 방송사의 방송기술 엔지니어들도 당근 동참하고 있다. 방송사 직원들은 경영진 입맛에 안 맞는다고 바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다. 스케이트장 관리는 매우 위험하고 전문적 분야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스케이트링 능력이 있어야 하고, 빙질을 고르게 하는 것은 월드컵경기장 잔디를 보수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아나운서나 PD가 쉽게 전업할 수 있는 직종이 절대 아니다. 빨리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종이는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 플랫폼이다. AI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감성을 코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머신에게 ‘시푸르동동한 컬러’란 색깔을 어떻게 코딩하겠는가? 감성이 곧 소통이다. 사람은 종이처럼 지나온 세월의 무게나 신념을 쉽게 바꿀 수 없다. 지금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경영진도 오래전에는 지금과 다른 신념이나 행동 양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본인들의 기원(紀元)을 생각했으면 한다. 기원 하나까 갑자기 1990년 K 본부의 서기원 사장님 생각이 난다. 그분 덕에 경찰서에서 2박 3일을 무료로 묵었던 고마운(?) 기억까지.

사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공영방송 KBS와 MBC의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및 제작 자율성 회복’을 목적으로 파업을 시작한 지 1주일 이 지났다. 파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는 점점 늘어 양대 공영 방송사 6,000명에 가까운 많은 구성원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무한도전〉 등 각종 프로그램의 결방이 속출하고 있다. 지상파를 대체할 tvN, JTBC 등의 대두로 시청자의 선택권이 많아진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청자에게 있어 지상파 대표 프로그램의 결방이 큰 불편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8일 ‘KBS·MBC 정상화 촉구 촛불문화제’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파업을 지지했고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4%가 ‘KBS와 MBC 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가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처럼 시청자 역시 KBS·MBC가 국민을 바라보는 건강하고 공정한 방송으로 복원되길 원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런 많은 국민과 양대 방송사 구성원의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 경영진은 업무 복귀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까지 현 경영진을 옹호하며 적극 개입하는 등 파업을 장기화로 몰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공영방송을 볼모로 한 자존심 게임이나 정과 싸움으로 인한 파업의 장기화 및 프로그램 결방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각자의 입장을 떠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KBS·MBC는 국민의 자산이며,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꿎은 수신료와 시청권만 낭비하며, 양대 공영 방송사를 지속적 혼란 속에 남겨두서는 안 된다. 많은 전문가가 현 경영진으로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현 KBS·MBC 경영진의 퇴진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다. 권력 감시와 약자 대변이라는 공영 언론사 본연의 역할 복원을 위한 신속한 방안과 조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유주열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김주형

취재기자 | 백선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AC(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 방법

- 1년간 8만 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KOBASHOW 2018



28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8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8.05.15-18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